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0년도 제43호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1.01.18.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정운수 “대한체육회장 선거 ‘말’을 막지 말자”

고진현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패러다임 시프트…인물선거에서 정책선거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 착수…단체별 선거인수 통보”

2021년도 체육분야 예산 1조 7594억원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사회 활력 회복에 주력…

정부 및 공공 의존도 96.5%로 덩치만 크고 자율성 없는 체제라는 평가도…

스포츠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움직임

“내년 하반기부터 스포츠인권침해 지도자 명단 공개 가능”

“제2 최숙현 막자…교육부, 체육지도자 통합관리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인권침해 35건…총 338건 접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정운수의 오프사이드] 대한체육회장 선거 '말'을 막지 말자

당사자들에게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독자들께서 새만금개발공사나 한국예탁결제원의 대표자 이름을 곤장 답할 수 있을지, 조심스레 여쭙본다. 단,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고 말이다. 글썄,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나 전략물자관리원의 대표자도 금세 떠올리기 어렵다. 이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고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중요한 공공기관, 정확히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여기 또 하나의 '기타공공기관'이 있다. 그런데 그 대표자 이름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다름 아닌 대한체육회장 말이다. 국제기구도 마찬가지다.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이름은 아리송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 이름은 그런 대로 생각한다.

'알쓸신잡'처럼 시작했지만, 이 간단한 사실에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20세기 중엽 이후에는 국가주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21세기에는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가치와 시장 확대 차원에서, 스포츠는 그 외연을 끊임없이 확장해왔다. 올림픽 같은 메가이벤트는, 눈앞에서 겨루는 것은 선수들이지만 장외에서 국제외교, 다국적기업, 첨단 미디어 등이 각축을 벌인다. 그것이 개별 국가로 연결되어 각국의 내부에서도 스포츠를 둘러싸고 이해를 달리하는 세력 간 갈등이 심화된다.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스포츠에서의 '굿 거버넌스'를 호소하고 다녔다. 2017년 7월, 국제태권도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내한한 바흐의 기조연설 제목 자체가 '올림픽 정신과 굿 거버넌스'였다. 이날, 바흐는 스포츠 조직의 신뢰성과 청렴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신뢰성이 떨어지면 조직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조직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대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올림픽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IOC가 오랫동안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흑역사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열광적인 관심은 선수와 감독에서 멈추지 않고 그 조직에까지 투사된다. 그 열광적 관심은, 특별히 부정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강렬한 사랑이고 영원히 지속될 애착이다. 올 시즌을 아름답게 장식한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의 경우처럼, 팬들의 감정은 선수들과 감독 그리고 구단주에게까지 직선으로 뻗어나간다. 그 애착은 단지 맹목의 감정으로 발산되는 게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 가치와 상식과 충분히 존중할 만한 고양된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때로는 매서운 감시와 날카로운 비판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스포츠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바로 그러한 감정에 의하여 이른바 '체육인'들이 살아간다. IOC가 스포츠 조직은 스포츠만큼이나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반드시 '굿 거버넌스'를 이뤄야 한다고 수년 동안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2021년 1월18일,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올해 말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19일 동안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어느 선거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이번 선거야말로 한국 스포츠의 미래, 나아가 이를 통한 한국 사회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 즉 20세기 '국위선양의 스포츠강국'에서 21세기 '모두를 위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강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행은 현 회장 체제에서도 나름대로 주장한 것이고 진천선수촌에 큼직하게 새겨져 있는 슬로건이니,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선거는 조직 운영과 회계상의 '굿 거버넌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스포츠가 국민적인 사랑과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비판 위에서 존재하는가를 입증하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선거문화가 거쳐온 과정이 그렇듯이, 체육회장 선거 역시 게임의 룰은 엄정하게 유지하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분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쉬운 대로, 이번부터 선거 규정이 개정되어 후보자간 공개 토론회가 최소 1회 이상 열리도록 되었다. 이로써 '굿 거버넌스'를 향한 첫 단추 하나를 겨우 끼우게 된 것인데, 더 많은, 더 다양한, 더 자유로운 쟁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 말을 막는 자, 최종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경기 내용'이 아주 알찬 한 달여의 대장정이 전개되어야 한다. 말을 막는 자, 그가 걸림돌이다.



고진현의

창(窓)과 송(槍)

스포츠서울
고진현 기자 2020.12.08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패러다임 시프트...인물선거에서 정책선거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막이 올랐다. 내년 1월 18일 열리는 이번 선거는 한국 체육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의미깊은 새 리더를 뽑는 만큼 경쟁의 열기는 뜨겁다. '체육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지금까지 두 가지 축으로 움직였다. 중량감 있는 정치적 인사나 재력있는 기업인, 주로 이 두 가지 부류의 인물이 체육인들의 선택을 받는 구도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정책 선거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인물 선거라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프레임이 작동했던 게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지닌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됐다. 체육은 시대와 사회를 견인하기 보다는 시대와 사회에 편승한다는 자조적 시각과 평가가 정책 선거와 멀어지게 된 결정적 이유다. 체육은 주변부의 가치로 평가절하됐다. 힘있는 정치인과 돈있는 기업인이 권력과 자본만 공급해주면 체육은 무리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한 인식이 이러한 선거 프레임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엄연히 체육도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중심부의 콘텐츠로 성장했다. 오히려 한국 사회의 결정적 아킬레스건인 삶과 죽음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해결책이 바로 몸의 철학을 회복하는 체육의 가치라고 봤을 때 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더할 나위없이 중요해졌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정책 선거의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약 2000여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선거인단 규모인데다 최근 체육 정책에 대한 현장의 불만과 반발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체육 회장 선거가 인물 선거로 치러진 배경에는 체육계의 관심이 개혁, 가치, 명분보다는 이해관계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각 후보와 자신과의 관계를 놓고 주판알을 튕겨보는 그릇된 풍토가 선거를 지배하는 프레임이었다는 게 필자의 견해다. 이제 한국 체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밖으로부터 강제되는 개혁의 당위성과 안에서 나지막히 들려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체육 개혁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개혁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는 방법론이다. 방법론을 놓고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는 자신의 철학과 지혜,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신 있는 선거 공약을 내놓고 이를 체육 현장으로부터 평가받으면 그 뿐이다. 이번 선거가 인물이 아닌 정책 선거로 치러져야 하는 이유다.

특히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핫이슈도 있다. 바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문제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빈약한 논리로 KOC 분리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체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을 공론화하면서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일 때 공청회라는 장(場)을 열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유리한 장치로 활용한 바 있다. 답은 간단하다. 각 후보들이 KOC 분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선거에서 심판받으면 되지 않을까. 만약 KOC 분리를 주장하는 쪽이 새 회장으로 당선되면 이를 근거로 KOC 분리를 결정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쪽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엔 KOC 분리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그야말로 깔끔하고 현명한 방식이다. 공청회도 필요없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닐까 싶다.

2016년 체육단체 통합 이후 쏟아진 정부의 체육 정책이 현장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서인지 일부 후보들은 정책 선거를 주저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체육은 체육인의 것이지 정부와 정치인의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참에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도덕성이 담보된 제대로 된 정책 선거가 치러졌으면 게 체육계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또다른 이유도 있다. 누가 당선되든 시대의 요구인 체육 개혁을 주체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체육 개혁을 외부의 강제에 맡겨서는 한국 체육의 미래가 없다. 대한체육회가 주체적 각성을 통해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수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스스로의 개혁 의지가 빈약했고 액션 플랜도 제시하지 못했다. 체육이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멀어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벌어진 틈에 정치가 끼어들어 체육은 쑥대밭이 됐다. 이제 공은 체육회로 다시 넘어왔다. 새로운 100년을 기획해야 하는 새 수장이 시대적 과업인 체육 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하기 위해선 동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아래로부터의 절대적 지지,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더욱 중요해진 까닭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 착수... 단체별 선거인 수 통보

대한체육회(회장직무대행 이강래)가 내년 1월 18일에 열리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단 구성에 착수합니다.

체육회는 이기흥 현 체육회장 임기 만료 70일 전인 10일, 각 단체에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하고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합니다. 새 체육회장은 통합 체육회 첫 수장을 뽑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선거인단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17개 시도 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선거인 후보자로 구성됩니다. 선거인은 크게 기본으로 배정된 인원과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시군구에서 추천한 인원 등 두 부류로 나뉩니다.

먼저 기본 배정표는 체육회 대의원 몫으로 할당된 121표, 회원종목단체 258표, 시도·시군구체육회 524표를 합쳐 모두 903표입니다. 체육회 대의원 121표는 정회원 단체장(62표)과 올림픽 종목 단체(38표), 시도체육회장 몫 17표, 한국 국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2표, 선수위원회 선수대표 2표로 이뤄졌습니다.

체육회 정회원인 62개 단체는 4표씩 총 248표를, 준회원 5개 단체는 2표씩 10표를 각각 행사합니다. 17개 시도 체육회는 4표를,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2표를 각각 받습니다. 선거인 추천 방식은 약간 복잡합니다.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올림픽 종목 여부, 전문 선수 등록 수, 지도자 등록 수, 동호인 등록 수 등을 따져 추천인 수를 단체마다 차등 배정합니다. 지방 체육단체는 인구 수와 운동부 수, 체육예산비율을 비교해 추천인 수를 결정합니다. 가령 올림픽 종목이면서 선수와 지도자, 동호인의 등록 수가 많은 축구 같은 종목은 투표권을 많이 받습니다. 지방 체육단체도 인구, 운동부 수가 많고 체육예산도 많이 배정하는 곳이 투표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습니다. 체육회는 선거인 추천인의 직군별 비율을 11~39% 수준으로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단체의 추천이 아닌 무작위 추첨으로 20일까지 선거인단 최종 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 903표에 추천인 수를 합친 내년 체육회장 선거인단 전체 수는 약 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체육회는 추산했습니다. 이는 체육회 대의원 62명, 회원종목단체 710명, 시도체육회 278명, 시군구체육회 355명 등 총 1천405명으로 이뤄진 4년 전 선거인단보다 600명가량 많은 것입니다. 체육회는 "선거인 수 산정 방식은 4년 전과 동일하다"며 "다만 기존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합쳐져 새로운 통합 체육회가 탄생한 뒤 전반적으로 조직이 커져 선거인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육회는 선거인단 확정과 함께 24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을 28일까지 마친 뒤 28~29일 이틀에 걸쳐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에 맞서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장영달 전 대한배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연구원 원장 등이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체부, 2021년 코로나19 체육산업 지원에 방점... “인권 강화·과학적 훈련 도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계 현장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문체부는 2021년도 체육 분야 예산이 1조 759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6961억원 대비 634억원(3.7%) 증액된 것이며, 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원의 25.6%의 규모이다.

2021년 체육 분야 예산 및 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본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6,961	17,594	634	3.7
재 원 별	일반회계	32	△1	△2.6
	균특회계	2,441	△540	△22.1
	체육기금	14,487	1,175	8.1
프로그램별	생활체육	9,137	△410	△4.5
	전문체육	3,881	58	1.5
	스포츠산업	2,162	955	44.2
	국제스포츠	864	36	4.1
	장애인체육	916	△5	△0.6

유병재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 분야 생태계 전반이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분야는 체육이다. 2021년 체육 분야 예산은 민간체육시설업을 포함한 스포츠산업 분야 종사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체육이 많이 침체된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고(故) 최속현 선수 사태라는 아픔을 통해 선수들이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 지원 및 소비 촉진과 연구개발(R&D) 강화로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며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과 체육 분야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스포츠의 위상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을 적극 반영했다.

다음 장 계속

◆ 스포츠기업 금융지원 확대 통한재도약도모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스포츠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기존의 762억원서 1192억원으로, 창업·중소·선도기업 지원은 168억 원에서 212억원으로, 체육 소비할인권엔 180억원을 반영했다.

스포츠산업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955억원(44.2%)이 증액된 311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비대면·온라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시장 육성 사업(내년 39억원)을 신규로 편성다. 또한 비대면 스포츠 체험 및 관람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2배 이상(2020년 78억원 → 2021년 177억원) 증액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과학적 훈련환경 조성 및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전문체육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58억원(1.5%)이 증액된 3939억원을 편성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연계 운영 및 생애주기별 이력 관리를 위한 스포츠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체계 구축 지원에 신규 자금 30억원,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가상현실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비대면 훈련 콘텐츠 제공에 신규로 100억원을 투자한다.

회원종목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건비 추가 지원 등 과학적 훈련환경을 구축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고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체육계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예산도 2배이상 늘렸다. 올해 23억원에서 53억원으로 증액, 권역별 지역사무소를 개소 등에 쓰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상담, 조사, 조치 등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된다.

◆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생활체육 분야는 일부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종료로 올해 예산 대비 410억원(4.5%)이 감액된 8727억원이나, 이를 제외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은 올해 예산 대비 267억원(4.2%) 증액된 6658억원을 편성했다.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사업'에 신규자금 40억원,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올해 대비 1만2450명이 늘어난 7만2000명에게 확대 지원하기 위해 277억원서 332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높였다.

국내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강습과 캠프 활동을 지원하는 '또바기 체육돌봄' 사업에도 10억원을 새로 투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장 계속

◆ 체육 분야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스포츠의 위상 강화

국제스포츠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36억원(4.1%)이 증액된 9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유치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차질 없는 개최 준비를 위해 4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2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 지원을 위한 11억원과 함께 주요 국제경기대회(약 50개 공모 선정)의 안전한 국내 개최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을 6억원(총 97억원) 늘렸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된 2020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이 안전하게 참가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방역지원(9억원)을 포함,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을 지원(194억원)할 계획이다.

한편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임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태권도원 수련 시설을 기반으로 발차기·폼새 등의 태권도 기술과 마음수련 등으로 구성된 '태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태권도연맹(WT) 승인 '태권도 국제대회' 유치 정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장애인 체육 분야는 올해 수준인 911억원을 유지했다.

지역에 방문해 체력측정·스포츠체험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시범사업(4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2020도쿄패럴림픽 대비 장애인 국가대표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상시훈련일수(190일→210일)를 늘리고, 그동안 훈련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원하던 지도자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대한체육회 예산 정부 및 공공 의존도 96.5% 덩치만 크고 자율성 없는 체질 바꿔야

내년 1월 18일 체육계의 얼굴인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각 경기 종목 단체의 선수를 비롯해 체육인은 600만명을 넘는다. 정치적 독립성이 강조되는 조직이지만 정부에서 해마다 4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는 이중적 속성을 지닌다.

이번 선거는 스포츠 인권과 공정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많은 체육시설이 문을 닫고 체육 활동이 위축된 어려움,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는 인식이 강하다. 각 학술 단체들도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통해 체육계의 과제와 새로운 리더의 자질 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조성식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체육 단체의 거버넌스(조직 행정 관리 시스템) 연구를 계속해온 스포츠사회학자다. 그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체육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커다란 정부와 커다란 대한체육회 체제에서 선진형 스포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어렵다”며 “이번 선거는 또 한명의 수장을 뽑는 게 아니라 철저한 분권주의에 따라 경기단체가 중심에서고 체육회와 정부가 기능적으로 협조하는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성식 교수가 바람직한 스포츠 리더와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담은 기고문이다.

스포츠가 정치적이냐? 아니면 비(非)정치적이냐? 또는 몰(沒) 정치적이냐? 의 문제는 낡은 논쟁거리다. 정치적이면서도 비정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정치 현상의 투영물로서 스포츠는 존재한다. 정치적 개입이 있고, 때론 노골적 정치적 표현이 있는 게 스포츠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은연중 개입을 하고 선거를 위해 사람들을 규합하는 일련의 과정은 정치적 행위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필자는 먼저 체육계의 존재론적 가치의 입장에서 대한체육회장이라는 체육계 리더의 이상적 모습을 그려보고 싶다.

다음 장 계속

대한체육회장은 우리 체육계의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첫째 체육단체의 자주성(autonomy) 보호이다. 올림픽헌장 제6조에도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NOC)는 자신의 자주성을 보호해야 하고(preserve),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포함하는 어떤 종류의 압력으로부터 저항해야(resist)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올림픽위원회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체육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선언적 원칙이다. 이 자주성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주성을 위해 무엇보다 재정적 자립도가 높아야 하고, 반대로 정부 지원금 비율은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우리보다 스포츠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의 NOC를 보면, 정부 지원금이 없거나(미국, 영국), NOC 전체 예산에서 정부 지원금 비율이 32.8%인 호주(2018년 기준), 44.5%인 일본(2018년 기준) 등으로 재원의 대부분을 기업 스폰서십, 경기단체 회비, 라이선싱 수입으로 충당하여 재정적 자주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 공공재정 의존도가 대한체육회의 경우 96.5%(2020년 기준)로 재정 종속성이 매우 심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체육회장은 조직의 자주성 확보와 보호를 위해, 먼저 체육계 젖줄 역할을 하는 토토수익금 소유와 분배의 재조정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즉 스포츠 경기 점수와 승패를 맞추는 토토에서 그 수익금의 소유권을 해당 스포츠팀/리그/연맹이 상당 부분 가지는 것으로의 전환이다. 토토를 하는 경기단체가 수익은 얻고서 대한체육회에 회비 및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 참가비용을 내고, 기업 후원금과 각종 라이선싱 사업 수입과 함께 재정 자립을 크게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체육단체의 독립성(independence) 보장이다. 독립성은 체육계와 정치권력의 역사적 관계에서 봐야 하는데 그동안 체육단체 주요 요직 인사를 보면 낙하산 관행이 많았다. 퇴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지인 관계자가 체육단체 임원이 되고 또한 정치권력과 유착된 모습이 종종 보여왔다. 이러한 체육단체의 정치적 비독립성, 심지어는 정치적 예측이 관행으로 지켜져 왔는데, 새로 선출된 차기 대한체육회장 체제에서 독립성 추구하고 보장은 쉽지 않은 도전이자 절대적 과제이다. 대선에서 지지했다고, 권력의 누군가가 뒤에 있다고 체육행정기관이나 체육단체 요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체육단체의 독립성은 보장되기 어려우며 더욱이 체육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헌장 준수는 무시된다.

이렇게 체육단체의 재정 종속성과 정치적 비독립성이 존재하는 우리 체육계에서, 정부와 그리고 국회와의 힘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 미래 대한체육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은 현재의 잠재적인 자주성과 독립성에서 성장할 수 있다. 체육계 내부에서 경기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시도체육회와의 관계도 대등한 파트너로서 상호의존적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포츠선진국이 아닌 대다수의 동남아국가, 중동국가, 아프리카국가, 중남미 국가의 체육단체는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거나 정치권력의 편에서 존재하여 사실 올림픽헌장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합체육회가 이런 국가들의 모습과는 달리 구별되고 스포츠선진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체육단체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당연히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은 자주성과 독립성에 비례해서 더욱 강화되고 요구될 것이다. 그래서 차기 대한체육회장은 정부/국회,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시도체육회 간의 권력 서열(?)이 있다면, 또는 없다 할지라도, 언급된 순서가 아닌 역순(경기단체 > 대한체육회 > 정부/국회)으로 권력서열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스포츠 인권 침해 지도자 명단 공개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스포츠 인권 침해 지도자 등의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다.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한 인권 침해자 명단 공개가 큰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 지도자와 단체 책임자의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다. 관련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 사항과 비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2조의3)이 신설됐다. 문체부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 등을 근절하려면 비위 지도자 등을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 또는 학교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받게 하고 실업팀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제2 최숙현’ 막자... 교육부, 체육지도자 통합관리한다

앞으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폭력 범죄 등 선수대상 범죄가 추가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고 가해 지도자의 징계를 누적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들은 11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안에 형사처벌 대상자 등으로 한정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성폭력 등 선수대상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년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비위 지도자에 대한 빠른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만으로도 체육단체 지도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하고, 자격 취소 정지로 다른 종목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징계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 교육청, 대한체육회로의 사안보고 및 징계결과 통보현황이 모니터링된다. 내년까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력 유형·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온정주의에 의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징계 완료 전 의원면직 처리도 금지된다.

학교밖에서 학생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범위에 학생선수 보호 의무가 추가된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도 1년에 한 번 정례화된다. 내년까지 인권침해, 폭력에 대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회당 1시간 이상의 스포츠 인권교육도 의무화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내년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 일수는 올해보다 10일씩 줄어든다. 학기 중 열리는 경기 대회는 가급적 주말 개최를 유도한다. 고입·대입 체육 특기자 선발 방식도 개선해 2025년 고교 입시부터 교과성적, 출결 등 학생부 반영비율을 현행 30%에서 40%이상으로 조정하거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8월 초·중·고 학생선수 5만5,42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학생선수 폭력피해를 실태조사 결과 가해자 519명 가운데 학교안지도자 5명을 해임하고 9명을 직무정지했으며 33명을 경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16명의 학교밖지도자는 아동학대로 신고해 6건이 기소됐고 2건이 검찰송치됐으며 12건이 경찰수사 중이다. 또한 학생선수 가해자 233명에 대해선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통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인권침해 35건...총 338건 접수”

스포츠윤리센터는 11일 "9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338건의 신고상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338건 가운데 신고가 91건(인권침해 35, 비리 56), 상담이 247건으로 집계됐다.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는 폭력이 21건(6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외 기타(명예훼손, 모욕 등) 10건(29%), 성폭력 4건(11%) 순으로 접수됐다.

스포츠 비리신고는 기타(금품수수, 직권남용, 부정 선발 등) 26건(46%), 조직 사유화 14건(25%), 횡령·배임 13건(23%), 승부 조작 2건(4%), 입시비리 1건(2%) 순으로 접수됐다.

신고자 및 상담자는 가족과 기타(체육계 관계인 포함)가 각 118회로 가장 많았다. 선수는 106회, 지도자 및 임명이 각 71회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고·상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이숙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체육인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 체육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g@spotvnews.co.kr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부정선거 제보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대한체육회장 선출 선거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 도덕적으로 신뢰받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사항

-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
- 후보자 비방, 중상, 인신공격,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 후보자 자질 및 도덕성 검증이 필요한 사항

전화 02-2279-8999 이메일 sports-cm@daum.net

※ 제보자의 익명성과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 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 sports-cm@daum.net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InquiryNo=2